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은 화재진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에게 오래된 전통에 의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같은 소방업무 중에도 재난관리 단계별로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최근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방' 단계에서의 소방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예방 단계의 '소방검사'가 해당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고 부조리도 많이 발생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제도 때문에 소방에게 다시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 소방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 검사를 안 하면 화재예방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관 주도 소방검사가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예방을 해야 할 주체들에게 '검사만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준 것은 아닐까. 화재를 예방할 책임과 함께 불이 나면 피해당사자가 되는 소유주, 업소주인 등이 필수적인 소화장비, 대피통로 확보 등 건축단계부터 지켜나가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 그리되면 따로 관에서 주민과 다뤄야 될 일도 없고 화재 예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꿈이나 이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불을 낸 사람에게 묻고, 소방은 불을 못 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념의 전환으로부터 가능해진다. 건축주가 소방설비에 관심을 더 보이고,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생각하게 해야 한다.

화재안전 정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소방 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에 신경 쓰면 보험료를 저감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시설별로 소방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화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잘 되어 있으면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분명히 하면 건물 관계인은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자연히 소방점검은 보험료 책정을 위해 보험사에서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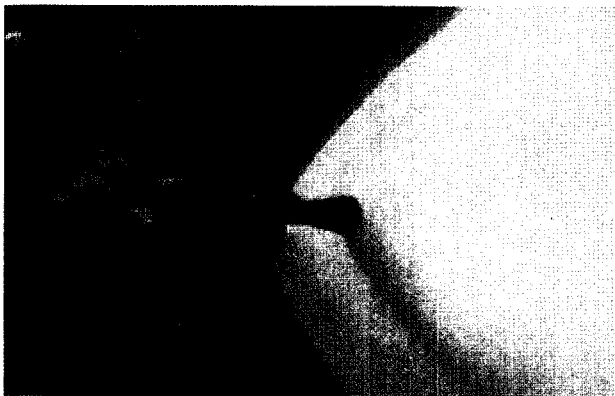
국민이 자발적으로 화재예방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화재보험을 보편화하고 보험사에서 검사와 점검을 통해 화재보험료를 부과하면 건축주나 영업주는 스스로 화재에 안전한 시설과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운전자책임보험처럼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재책임보험 도입도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고 이웃으로 확대될 경우 과거에는 가벼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옆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실수로 낸 화재의 경우 그동안 중과실에만 손해배

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이하 실화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및 법률 적용중지 결정을 내려 2009년 5월 8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실화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를 마련하는 기준도 화재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파트 등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할 때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곳은 비싼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가족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던가.

소방시설 관리 적정성과 소방안전 확보 여부가 건물 가격이나 임대료의 기준 중의 하나가 되면 건물주는 자발적으로 화재예방활동과 건물 시설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다. 수요자가 원하면 공급업체에서도 안전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각시키고, 입주자가 소방안전 부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면 건설업자는 자율적으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소방안전을 챙기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소방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마케팅 포인트를 소방안전에 두게 될 것이다. 즉, 건설업체에서도 소방안전기준 충족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과거 정책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건축물 구조나 도시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소방장비는 기존 모형을 답습하고 있다. 주거형태나 도로여건 상 고가의 소방차나 사다리차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 접목해서 변화된 현장 여건에 맞는 소방장비를 개발, 실제 화재진압 및 구조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안전과 관련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로 그 권한 내에서 심판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소방산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은 '신뢰받는 소방, 능력 있는 소방관'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안전'에 목표를 두고 소방의 '수비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나 소방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소방의 수비범위를 국민안전에 집중해서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소방력을 집중하고 현재의 인력과 장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타성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더 좋은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재난발생 때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은 물론 각 시·군·구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과 IT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동하는 방재를 실천해야 한다.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재난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안전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